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 동 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118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13.

발 의 자 : 최동철, 강선영, 박성호,  
박주선, 신찬호, 김성한,  
박학용

### 1. 제안이유

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, 자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 이와 더불어 강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 
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살 실태 및 통계, 분석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나.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다.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- 라.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의2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제4조, 제11조

나. 협조부서 : 건강관리과

다. 입법예고 : 2023. 10. 16. ~ 2023. 10. 20.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 및 통계·분석결과를 매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.

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제3호의 사람은 1명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”을 “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상담치료를”을 “상담치료 및 진료비 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방문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(自助)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종류와 그 이용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자살실태조사 등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6조(자살실태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 및 통계</u> <u>· 분석결과를 매년 구청 홈페이지</u> <u>지를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.</u>
제7조(위원회의 설치·구성) ① ~ ③ (생략)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<u>위촉한</u> <u>다.</u>  1. ~ 5. (생략) ⑤·⑥ (생략)	제7조(위원회의 설치·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위촉하</u> <u>되, 제3호의 사람은 1명이상 위</u> <u>촉하여야 한다.</u> 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<u>자살</u> <u>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</u> <u>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</u> <u>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</u> <u>라 설치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</u> <u>에 둘 수 있다.</u> ③·④ (생략)	제11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자살</u> <u>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</u> <u>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</u> <u>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-----</u> -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	제13조(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) ① -----

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,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상담치료 및 진료비  
등을 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구청장은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방문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3조의2(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(自助)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종류와 그 이용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□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살실태조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,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별·나이·학력,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
2. 자살에 관한 생각,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
3. 신문·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, 결과발표,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